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와 한계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시 정책자문위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정책과 공공부조분야이다. hersun@sch.ac.kr

서울시 복지정책사례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와 과제

허 선
(순천향대학교 교수)

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배경 :

朝鮮日報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A14면 사회

저소득층 6만명에 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내년부터 기초수급자와 대상 소득·주거·돌봄 등 5대 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 확정·발표

내년부터 서울시가 정부 기초생활 수급자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층 6만명에 4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 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이른바 '서울형 기초수급자'를 2018년까지 19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해산·장례비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5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5대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분야별 복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새로 최저기준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적정기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발표하고 있다.

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가구 소득 10% 이내 지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등니다 2곳 이상 세워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중 30% 이상을 국·공립으로 채울 예정이다. 보육료 외 기타 활동비 부담도 보육료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구 5만~10만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중앙일보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018면 사회

서울시 복지 사각 19만명 생계·교육비 지원 받는다

전국 지자체 중 복지기준 첫 발표

기초수급자보다 선정 기준 완화

공립 어린이집 전체 30% 이상 확대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영미(58)씨는 과거를 주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연탄을 굶고 사는 아들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정영수(42·무직)씨도 소득이 없지만 보증금 7000만원짜리 전셋집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소득, 주거 등 분야별 복지 기준을 정해 이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2일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서울시민 복지기준

자료:서울시

분야	최저기준
소득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주거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최저 주거기준(4인 가구 기준 43㎡)을 충족한다.
돌봄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돌봄 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	경제적·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한다.
교육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모든 서울시민이 교육기회 균등 누린다.

지 공공인대주력을 늘리기로 했다.

돌봄 분야 복지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등니다 2곳 이상에 배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확충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인구 5만~10만 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

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배경: 제1 공약

원순씨가 약속하는 변화와 희망

'서울시민복지기준' Seoul Standard 2012-2018

'인간다운 생활, 안정된 삶이 실현되는 사람도시 서울'

'토건행정을 넘어 사람에게 투자하는 서울'
'공공복지와 삶의 질 중심의 새로운 도시행정'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준'

서울의 변화와 희망을 만듭니다!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민복지기준' Seoul Standard 2012-2018

비전	인간다운 생활, 안정된 삶이 실현되는 사람도시 서울
목표	서울시민 누구나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 보장
사명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에 놓는 서울시정 세계 20위권 도시경제에 걸맞은 선진 복지행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반한 도시 경쟁력
전략	사회적 함의를 통한 시민복지기준 수립, 이행 각 지자체·구별 복지 격차 해소 전략, 계획 수립 중앙정부·지자체와의 전략적 협의와 협력 추진 시민복지기준에 부합하는 복지신화형 발령예산 재정비
계획	시민복지기준 추진기구 구성 서울시민 '삶의 질' 실태조사, 지표 및 정책 개발 시민복지최저선 확정 및 계획 수립(1단계 사회적 합의) 시민복지적정선 확정 및 계획 수립(2단계 사회적 합의) 당해 연도 이행점검 및 평가결과 공표

2.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정: 시민참여형



4

2.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정 : 시민참여형



2.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정: 1,000인 원탁회의

경향신문

2012년 08월 10일
14A면 (지역)



서울시 복지정책 내손으로 '1000인 원탁회의' 서울시가 시민복지기준선 완성을 위해 9일 돌림푼상경시장에 마련한 '1000인의 원탁회의'에 참석한 시민들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별로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개월간 마련한 5개 분야 28개 복지정책과, 이날 원탁회의의 현장에서 25개 정책 제안을 받아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장근 기자 jedgk@kyunghyang.com (25.1*13.3cm)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주요 개념과 기준

구분	최저기준 (minimum standard)	적정기준 (decent standard)
수준	누구나 누려야 할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책임	서울시가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수준	서울시·공동체·개인 공동책임으로 보장되는 수준
분야	시민참여형으로 규정한 미래상	
소득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수 있는 서울	
주거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돌봄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	
건강	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교육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소득분야 기준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소득

최저기준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 보장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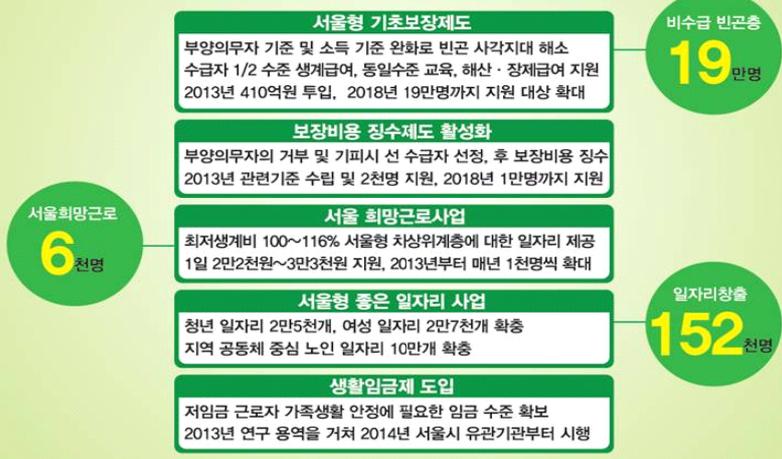
적정기준 > 중위 소득 50% 수준 이상 확보 지원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8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소득분야 사업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9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주거분야 기준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주거

최저기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 이하
주거공간 43m² 이상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주거 최저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민중 누구도 한뼘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이하
주거공간 54m² 이상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m²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주거분야 사업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이 있는 서울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비중
10%

공공임대주택 확충

5%대의 주택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확대
2013년 8천670억원 투입,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2014년까지 매년 1만가구, 2018년 매년 2만가구 주택바우처 제공
2013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 지원 대상 확대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주택개량사업을 단순교체에서 에너지효율화로 전환
2014년까지 매년 500호, 2018년 매년 1천500호 지원

주거지원센터 지원 확대

2018년까지 20개소로 확대(센터당 1억2천만원 지원)
가구특성별 사례관리 및 자활프로그램 연계

노인 장애이용 지원 주택

주거와 휴먼서비스 결합한 지원 주택 2018년까지 1천500호 제공
기존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매년 150호 지원

주택바우처
2만 가구

노인 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돌봄분야 기준

영유아 · 아동 · 노인 ·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



돌봄

최저기준 소득 10% 이내 저출로 돌봄서비스 이용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하에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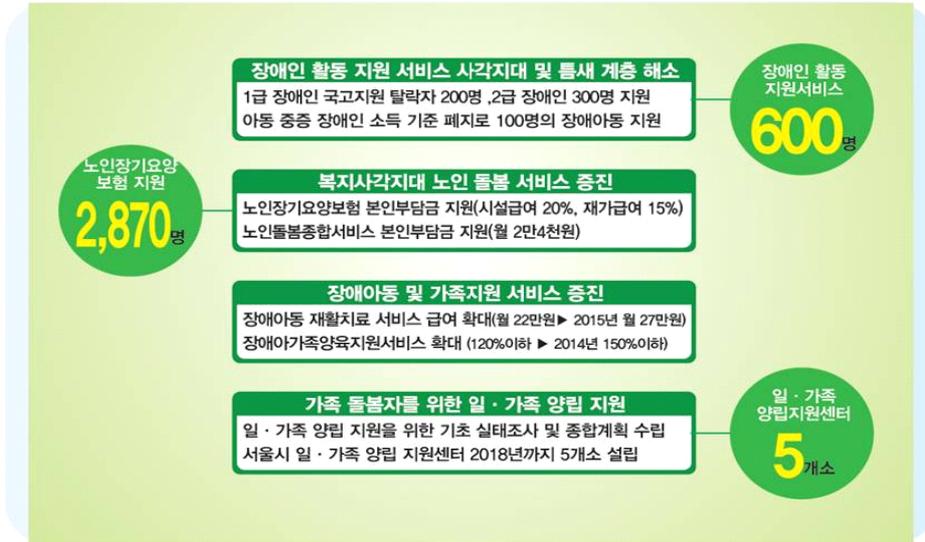
적정기준 10분 이내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 이용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분 이내 거리에서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
돌봄의 수요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돌봄분야 사업1

공공의 책임 하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서울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돌봄분야 사업2



14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건강분야 기준



15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건강분야 사업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0' 인 서울

야간 휴일
진료센터
100개소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걸어서 1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서울형 보건지소 75개소까지 확충
2018년까지 서북권 종합병원, 동남권 노인병원 설립

서울형보건지소
75개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만성질환관리 지원 시민건강포인트 제도 7개구 시범 실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3만4천명 대상 치과 주치의 시행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야간과 휴일진료센터 2014년 100개소 운영으로 의료 공백 해소
24시간 전문가 건강 상담이 가능한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환자안심병원 운영과 재가 중증 환자 지원
가족 간병이 곤란한 입원환자에 무료 간병 서비스 제공
환자복지 희망센터 및 환자권리 옴부즈맨 운영

환자안심병원
430병상

건강한 마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 속 발암물질 감소시켜 암예방관리 강화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2018년까지 6천2백명으로 확대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교육분야 기준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교육

최저기준 ▶ 학령기 교육 기본권 보장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적정기준 ▶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

의무교육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성인의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교육분야 사업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서울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 초중등 수익자 부담 경비 제로화**
학습 준비물비 등 취약 필수 경비 무상화 단계적 확대
2014년 초·중학교 전체로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운영
아웃리치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
노후 교육시설 현대화, 개인위생 증진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폭력 없는 학교안전망 구축**
모든 초·중·고·특수교에 학교 보안관 등 학교안전 전담인력 배치
2018년까지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25개 운영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교육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교육장 2개소 추가 설치
2018년까지 600개의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사이버 강좌 운영

수익자 부담
교육경비
0원

사이버강좌
600개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연차별 예산 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

1조 9,460억원

2012년

2조 7,370억원

2013년

3조 8,200억원

2014년

4조 3,890억원

2018년

재원구성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분야별 소요예산

소득	2,290억원
주거	8,970억원
돌봄	1,740억원
건강	860억원
교육	1조 3,510억원

4.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현황: 2015년 주요사업별

구분	계	추진 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계	105	96	88	1	7	9
소득	12	12	12	-	-	-
주거	19	18	18	-	-	1
돌봄	24	24	23	-	1	-
건강	25	22	18	-	4	3
교육	25	20	17	1	2	5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80%이상), 미흡(70~79%), 부진(70%미만)

☞ 미흡사업: 1개 ▶ 교육(1)-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추진 71%

☞ 부진사업: 7개

▶ 교육(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66%,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38%

▶ 돌봄(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45%

▶ 건강(4)-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60%, 서울건강콜운영 38%, 학생저소득아동치과추치의사업 46%,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46%

20

4.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현황: 2015년 성과지표별

구분	계	추진 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 미도래	계획변 경
계	35	34	32	1	1	1	-	1
소득	5	5	5	-	-	-	-	-
주거	4	4	4	-	-	-	-	-
돌봄	12	12	12	-	-	-	-	-
건강	6	6	4	1	1	-	-	-
교육	8	7	7	-	-	1	-	1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80%이상), 미흡(70~79%), 부진(70%미만)

- 미흡 지표(1개) : 흡연률 자치구 간 격차 (건강, 71.6%)

- 부진 지표(1개) : 자살률 자치구 간 격차 (건강, 63.6%)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1

4.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현황: 2015년 성과지표별

분야	성과지표		15년목표	15년 추진실적		추진사항
				실적	달성률	
소득 (5)	서울형기초보장제도수혜자수(명)/누계		115,000	112,294	97.6	정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명)	기존	208,000	208,594	100.4	정상
		보장비용징수제도활용/누계	6,000	16,982	283	정상
	최저소득기준보장률(%)		41.7	44.57	107	정상
	적정소득기준보장률(%)		88.2	89.1	101	정상
주거 (4)	노숙인주거지원비율(%)		13	15.03	115	정상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10.5	7.1	147	정상
	전체임차가구의소득대비임대료비율(%)		23	22.6	101	정상
	주택재고대비공공임대주택비율(%)		6.8	6.8	100	정상

22

4.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현황: 2015년 성과지표별

분야	성과지표	15년 목표	15년 추진실적		추진사 항
			실적	달성률	
매일 기준 (7)	어린이집평가인증률(%)	77	76.4	99.2	정상
	어린이집월이용자부담액50%이하가구비율(%)	52	100	192.3	정상
	방과후아동돌봄률(%)	56	56	100	정상
	요보호아동친가정적환경보호율(%)	37	87.07	235.3	정상
	노인요양및돌봄서비스이용률(%)	9.2	11.28	123	정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률(%)	89	83	93	정상
	돌봄비용과다지출가구비율(%)	5.3	14.7	277	정상
매일 기준 (5)	보육교사1인당유아수(명)	17.3	16.2	106.7	정상
	요양보호사1인당시설입소노인수(명)	2.4	2.35	102	정상
	장애인1인당활동보조인수(명)	3	2.8	93.3	정상
	사회복지종사자1인당서울시민수(명)	143.4	107.4	133.5	정상
	국립어린이집2개이상설치한행정동비율(%)	85	75	88	정상

23

4.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현황: 2015년 성과지표별

분야	성과지표		15년목표	15년 추진실적		추진사항
				실적	달성률	
건강 (6)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평균치(%)	15	11.4	132	정상
		자치구간격차(%p)	16	10.5	152	정상
	경제적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평균치(%)	22.5	19.1	117	정상
		자치구간격차(%p)	28.5	31.1	91	정상
	보건기관	총개소수(개)	67	68	102	정상
	자살률	평균치(명)	23	24.7	93.1	정상
		자치구간격차(%)	52.5	82.5	63.6	부진
	흡연률	평균치(명)	21	20.6	102	정상
		자치구간격차(%p)	7.8	10.9	71.6	미흡
	비만율	평균치(명)	21	23.9	87.9	정상
자치구간격차(%p)		9.9	11.2	88.4	정상	

24

4.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현황: 2015년 성과지표별

분야	성과지표		15년목표	15년 추진실적		추진사항	
				실적	달성률		
교육 (8)	학습준비물지원수준만족도(%)		55	98.7	179.5	정상	
	친환경무상급식수혜율(%)		100	100	100	정상	
	대안교육지원학생수(명)		2,420	1,700	70.2	정상	
	학교급별학급당평균학생수 25명이하학급수(교,학급)		중앙정부와 연계 중·장기 추진			계획변경	
	학교시설개선비율(%)		55	53	96.4	정상	
	학교폭력및예방전담인원수(명)		2,386	2,413	101.3	정상	
	시민교양대학 온라인운영	온라인운영	강좌수(개)	450	466	103	정상
			참가자수(명)	60,000	86,000	143	정상
오프라인 운영(개소)		3	3	100	정상		

25

5.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 외부 평가

서울시, UN 공공행정상 4관왕

대표 복지브랜드 서울시민복지기준 대상 수상

서울시가 2013년 역대 최초로 UN공공행정상 4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과거 2개 사업이 동시에 수상한 경험은 있었지만, 4개 사업이 동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UN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UN경제사회적 공공행정발전국에서는 지난 5월 14일 2013년 UN공공행정상의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수상 사실을 통보했다.

4개 수상은 서울시민복지기준(시민참여 촉진 분야, 예코마일리지제도(시민참여 촉진 분야), 여성 1인가구 종합 지원정책(성인지 정책 분야, 반부패 청렴건설행정시스템(부패 방지 분야)

이다.

UN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상으로, 2003년 제정된 이후 해마다 국내·외 많은 공공행정 수행기관들이 수상을 다룬다.

UN은 2003년 6월 23일을 'UN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전 세계 공공기관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 또는 정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정책 사례를 선정, UN공공행정상을 주고 있다.

5개 특별별 5개 분야의 우수 공공행정사례에 대해 시상하며, 서울시는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공행

정사례와 경쟁한다.

서울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여된 12개의 상 중 4개를 휩쓸며 1회 최고 수상기관이자 역대 최다 수상기관이 되었다. 또한, 올해는 복지서비스는 물론 시민참여정책과 반부패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기에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시민참여 촉진분야'에서는 서울시가 대상과 우수상을 모두 차지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모토로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장려하고 민·관협치를 실천하는 박원순 시장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

음을 보여준다.

시민참여 촉진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가 정책의 바탕이 되는 지침을 162회의 회의를 거쳐 시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162회의 회의를 거쳤고 온라인 게시판, 1000인의 원탁회의, 정책워크숍, 시민패널단인 '서울복지메이킹단' 등 기존의 의견 수렴방법과는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참여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또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정립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통신〉

5.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 전국 전파

- 부산
- 광주
- 대전
- 완주군
- 대구
- 세종
- 경기도

5.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 [사례]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구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원							
	누계 (2013. 7월 ~ 2015. 9.30)				2015년 신규 발굴			
	계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타복지 연계 지원	계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타복지 연계 지원
가구	58,988	8,185	38,707	12,096	23,584	1,679	17,804	4,101
인원	94,179	12,185	61,308	20,686	39,299	2,556	29,780	6,963

구분	2012		2013		2014		2015.6월	
	수급자 인원	증감						
서울시	200,371	△3.1	202,991	1.3	207,736	2.3	208,594	0.4
전국	1,395,103	△5.9	1,350,891	△3.2	1,328,713	△1.6	1,315,729	△1.0

28

5.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

(사례)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성과

-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수급자 발굴
- 대폭 완화된 선정기준 적용의 시범사업적 성격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

29

6.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한계: 지방정부의 한계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

- 소득** 중소도시, 대도시의 차별화된 최저생계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 개정
- 주거** 소형·저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 대상 및 면적 기준 완화
- 돌봄** 공공돌봄서비스 기관의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 건강** 보건복지관련 인력 충원에 대한 중앙정부 총정원제의 탄력 적용
- 교육**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정책 결정 및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교원 채용 규모 확대
-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제도 개선 필요

30

6.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한계: 중앙정부와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4 유사중복 정비기준

□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별로 정비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정비

구분	정비기준	공통기준
사회보험		•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범용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공공부조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15.7)에 따라 기존 지자체 사업과의 상호보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추진 권고	•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적합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 하는 추가급여 지급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으로 정비
		•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
		• 기존 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강구
		• 지자체별 재정 상황, 인구 구조 등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간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 정비

31

6.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한계

(사례)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예상보다 적은 수급자수의 증가
- 서울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소득기준
- 미흡한 생계급여 수준, 의료급여 미실시
- 예상보다 적은 수급자수의 증가
- 전달체계로 인한 사각지대 발굴의 한계

“사각지대 해소는 단지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상당한 행정력과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